

정부 바뀔 때마다 양산된 유사특구 실패 끊어내야.. '메가특구' 지속가능성 3대 원칙 제시

- 지방투자촉진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및 메가특구 연계로 30년 혁신 생태계 설계해야 -
- 규제특례의 실효성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얼마나 균형있게 설계하느냐가 메가특구의 성패 좌우 -

민주연구원,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지방투자촉진법안 그리고 메가특구』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송창욱)은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 정책브리핑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지방투자촉진법안 그리고 메가특구』을 발간했다.
 - 송창욱 원장 직무대행은 “수도권 일극 집중과 불균형의 고착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일자리 격차를 심화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5극3특 권역별 거점을 육성하고자 ‘기회발전특구’를 지방투자 촉진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메가특구’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연구원 윤종석 수석연구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5극3특 지역균형성장’과 지방투자 촉진법안 제정과 ‘메가특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 지방투자촉진법안(기회발전특구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정무위 소관 예정인 메가특구법안과의 통합적 연계성을 높이고, 5극3특 틀 속에서 두 법안의 동시 제정·시행을 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해야 함.
 - *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산업 기반을 담당하고, 메가특구는 초광역권의 규제·재정·인재·인프라를 묶어 국가 전략산업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상호 보완 관계.
 - 메가특구는 여러 부처 규제를 동시에 풀고 조정하는 규제특례의 실효성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얼마나 균형 있게 설계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임.

-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신규 유사 특구가 지속적으로 양산되면서 특구 간 기능이 중복되고 지원 체계도 분절되는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30년을 내다보는 혁신 생태계 설계가 매우 중요함.
 -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유사 특구제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메가특구는 ①현장수요 중심의 규제혁신 ②핵심 규제특례의 선택과 집중 및 성과 관리, ③앵커기업 유인과 정주 여건 개선 등 3대 원칙의 정합성을 확보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함.
 - ① [현장수요 중심의 규제혁신] 전국에 같은 특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권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특례를 설계해야 함.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부처 간 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 기반 조성까지 병행하는 ‘원스톱 현장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② [핵심 규제특례의 선택과 집중 및 성과 관리] 특례의 단순 나열 보다 기업의 성장 기반과 지역 투자로 직접 연결되는 메뉴판식 특례와 수요응답형 유예를 결합해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특례 성과 관리를 위해 평가 체계를 재설계하고,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투자를 위한 예측가능성을 강화해야 함.
 - ③ [앵커기업 유인과 정주 여건 개선] 앵커기업뿐 아니라 협력기업까지 포함한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진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교육기관과 연계한 우수 인재를 확보해야 함. 정주 여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세제·금융·재정 등을 통한 포괄적 지원으로 메가특구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해야 함.
 - 향후 ‘성과 중심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무늬만 특구를 과감하게 재정비하고, 특구의 혁신 성과 검증과 ‘일몰제’ 강화로 사후관리를 체계화해야 함.
- 또한, 윤종석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교체 때마다 양산된 유사 특구 실패의 고리를 끊고, 메가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성과 관리 중심으로 정책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방투자촉진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및 메가특구 연계로 30년 혁신 생태계를 설계하고, ①현장수요 중심의 규제혁신 ②핵심 규제특례의 선택과 집중 및 성과 관리, ③앵커기업 유인과 정주 여건 개선 등 3대 원칙으로 메가특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끝/